

한·일 투자협정과 해협권 경제 관계

- 협정의 효과에 관한 예비적 조사 -

사쿠라이 히로시(구루메대학 교수)

< 차례 >

서 두

1.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과 성격
2. 한·일 투자협정을 둘러싼 한국의 시점
3. 한·일 투자협정에 대한 반대
4. 일본의 대 일본 직접투자 도입 정책의 적극화와 한·일 해협권 지역
맺음말

서 두

199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제 협정이 체결되는 가운데, 북동 아시아 지역은 공백 지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를 직격한 통화 위기는 북동 아시아에도 큰 충격을 줘서 지역적인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래, 북동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도 지역적 경제 협정의 제안·교섭이 잇따르게 되었다. 그 중의 몇 가지는 이미 협정이 체결되어, 실시에 옮겨졌다. 일본을 보면, 2002년 11월에 발효된 싱가포르와의 경제 연계 협정이 있고, 2003년 1월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은 2번째의 지역적 경제 협정이 되었다.

본고는 북동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 무역 협정이나 경제 공동체의 제안이나 교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시에 옮겨진 한·일 투자협정에 주목하고 금후 이 협정이 미치는 효과나 담당할 역할을 생각해 보기 위한 예비적 조사이다.

1.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과 성격

한·일 투자협정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근거하여 1998년 11월 일본의 與謝野 경제 산업상과 한국의 韓憲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과의 회담으로 협정 체결 교섭의 개시에 합의한 후, 같은 달에 개최된 한·일 장관 간담회에서도 양국의 수뇌간에서 합의되어 교섭이 개시되었다.

우선 1999년 2월부터 2회의 예비적 협의가 행해진 후, 같은 해 9월부터 본 협의로 이행, 2001년 12월까지의 2년 3개월 사이에 9회의 본 회의와 본 회담을 보충하는 13회의 실무 협의를 거쳐 기본적인 합의에 달했다. 다음 해 2002년 3월의 小泉 총리의 방한에 즈음하여, 일본측 寺田 대사와 한국측 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사이에서 조인이 이루어졌다. 그 후,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 등 필요한 수속을 거쳐서 2003년 1월 1일에 발효되기까지 이르렀다.

이상이 간단한 교섭 경위이지만, 예비 교섭이 행해진 1999년 2월부터 헤아려보면 협정 발효까지 약 4년이라는 긴 세월을 요한 것이 된다. 그 주요 요인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투자 협정은 이 이전에 일본이 맺은 9개의 투자 협정과 달리, 선진국간 레벨의 내용을 담은 것에 있었다고 생각된다.¹⁾

여기에서 본 투자 협정의 주요 내용과 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양 체약국은 투자 재산의 설립·유지·운영·확대·처분 등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주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제2조)

다음으로 이러한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나 금지 조항에 대한 유보나 일반 예외의 조항이 있으며, 이것에는 「기존의 조치」와 「긴급시의 조치」의 2가지의 경우가 있다. 「기존의 조치」에서는 협정의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제2조), 임원의 국적 요구 금지 규정(제8조 3항), 퍼포먼스 요구의 금지 규정(제9조) 등과 비정합적인 기존의 모든 조치가 리스트 업 되어 현상 유지(Stand Still)로부터 정합화(Roll Back)로 향해야 할 분야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구분되어 명기되었다. 「긴급시의 조치」(제16조)에서는 전쟁 등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사태가 발생하여 협정과 비정합적인 조치를 도입할 때는 상대국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3번째로 투명성에 관한 조항(제7조)에서는 투자 관련 법제, 규칙의 공표 의무에 추가해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 새로운 해당 법제 등의 조화를 하는 권리를 규정했다.

4번째로 퍼포먼스 요구의 금지(제9조)에서는 가능한 한 광범한 퍼포먼스 요구 금지를 담고 있고 주요한 것을 들면 이하와 같다.

- a) 수출 요구
- b) Local Content 요구
- c) 국산품·서비스 조달 요구
- d) 기술 이전 요구

1) 한·일 투자협정 이전에 일본이 체결한 투자 협정의 상대국은 이집트(1978년), 스리랑카('82년), 중국('89년), 터키('93년), 홍콩('97년), 파키스탄('98년), 방글라데시('99년), 러시아(2000년), 몽고('02년)의 9개국·지역이다. 이들의 투자 협정은 일본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것에 주안이 있어, 쌍방이 OECD 가맹국인 한·일간의 협정이 투자 자유화의 원칙을 정한 것과 성격이 다르다.(외무성 홈페이지 「일한 투자 협정의 서명」 참조)

e) 현지인 고용 요구

5번째로 합동 위원회의 설치(제20조)가 있다. 본 협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규정했다.

끝으로, 투자 환경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협정의 전문에서 노사 관계의 중요성에 언급했다.

이상이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이전 일본이 맺은 9개의 투자 협정이 투자의 보호, 송금의 자유, 수용시의 보상 등, 일본 자본의 보호가 주요 내용이었음에 대해 본 협정은 일본이 싱가포르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경제 연계 협정의 투자의 장과 거의 같은 레벨, 투자 활동의 자유라는 기준에서 봐서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되어 있다.²⁾

2. 한·일 투자협정을 둘러싼 한국의 시점

한·일 투자협정이 발효되어 만 1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그 동안 양국의 사이에서는 국가 레벨에서 투자 상황에 협정의 효과나 영향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1>에는 2003년도 상기까지의 통계밖에 없지만, 협정이 발효된 2003년도 상기는 발효 전의 2002년도 상기보다 일본의 대 한국 직접투자 건수는 오히려 감소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액도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해협권 지역에서도 같다. 아직 협정이 발효된 지 1년 정도로 너무 기간이 짧아서,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표 1> 일본의 대 한국 직접투자와 한국의 대 일본 직접투자

(단위 : 건, 억엔)

	2001년도		2002년도		2002년도 상기		2003년도 상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 한국 투자	47	704	44	915	25	392	19	197
대 일본 투자	31	30	40	31	20	7	22	23

자료 : 재무성 통계

단, <표 1>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투자 건수에서 각 시기 다 한·일 쌍방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금액에는 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건당의 평균 투자액은 일본

2) 협정의 내용이나 성격에 관해서는 주로 경제 산업성 및 외무성의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에 의거하고 있다.

의 16.5억엔에 대해 한국측은 0.9억엔으로 약 18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1>과 시기적으로는 약간 벗어나지만 1999년도부터 2002년도에 걸친 4년간의 직접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자.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에서는 기계 산업에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상사·무역업과 서비스업이며 액수도 소규모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화학, 철·비철, 전기 등이 주요 업종이며 투자액도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상업, 금융·보험,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같은 업종의 경우도 한국의 대 일본 투자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나 있다.<표 2-1, 표 2-2>

투자협정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한·일 경제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2003년 9월 중순, 한·일 해협권에 가까운 울산발전연구원, 대구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의 3연구원을 방문하고 인터뷰나 디스커션을 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하에 그 때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기로 한다.³⁾

<표 2-1> 업종별 대내 직접투자 -한국

(단위 : 건, 억엔)

	1999		2000		2001		200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식품	1	0	-	-	1	1	6	1
기계	5	20	3	30	1	0	2	1
유리·토석	-	-	-	-	1	0	-	-
기타	-	-	-	-	-	-	1	1
제조업 계	6	20	3	30	3	1	9	3
통신업	-	-	-	-	-	-	1	3
상사·무역업	24	74	11	3	17	25	15	7
서비스업	17	12	43	7	11	4	15	18
운수업	2	1	1	0	-	-	-	-
부동산업	-	-	1	12	-	-	-	-
비제조업	43	87	56	22	28	29	31	28
합계	49	107	59	52	31	30	40	31

자료 : 재무성 통계

3) 이 내용은 필자의 책임으로 정리한 것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 디스커션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양해를 얻지 않았으므로, 개인 이름은 내지 않기로 했다.

<표 2-2> 업종별 대외 직접투자 -한국

(단위 : 건, 억엔)

	1999		2000		2001		200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식량	-	-	2	51	1	2	1	4
섬유	3	163	-	29	-	-	-	-
목재·펄프	2	19	-	-	-	-	1	10
화학	3	65	2	106	3	42	4	106
철·비철	7	289	3	105	-	35	2	15
기계	1	2	2	9	2	10	-	-
전기	6	49	16	165	4	55	6	48
수송기	2	63	7	42	1	8	4	141
기타	5	218	1	21	-	97	7	41
제조업계	29	868	33	528	11	249	25	365
농·임업	-	-	-	-	1	3	-	2
광업	-	-	-	-	-	-	1	2
건설업	1	1	-	-	-	-	1	2
상업	9	34	4	78	10	29	7	128
금융·보험	17	124	4	121	13	253	6	237
서비스업	3	29	10	167	9	81	4	17
운수업	2	8	1	5	2	5	-	2
비제조업	32	196	19	371	35	371	19	390
지점	1	30	-	-	1	83	-	9
합계	62	1,094	52	899	47	703	44	764

자료 : <표 2-1>과 같다.

우선 북동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의견이다.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서 자타 공인하고 있으므로 경제면에서 더욱 리더십을 발휘하여 북동 아시아를 리드해야 한다. 경제 분야의 자유화에서도 자유화에 의해 가장 이익을 얻는 것은 일본이므로, 일본은 각 분야에서 솔선해서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이 개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강하다. 북동 아시아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력은 아직 약하므로 일본은 어느 정도 희생을 치러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함께 가는 것은 어렵다.

이 의견은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제력에 관해서 한국측의 인식과 일본측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본의 정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성공 못하고 있으므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사정도 생각된다.

다음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나 기술 협력에 기대하는 의견이 강했다. 대구 지역에도 몇 개의 일본 기업이 진출하고 있지만 경영은 순조롭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노사 관계를 걱정하지만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가까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기 때문

에 한·일이 협력해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확실히 일본의 경영자는 한국의 노사 관계를 대 한국 투자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필자가 한국에서 들은 의견 안에서도 한국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3개의 과제로서 정치와 돈의 관계, 교육 내용과 함께 노사 관계를 든 의견이 있었다. 그 의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조합 임원 중에는 조합 전종자도 회사에서 급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수가 딸린 고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노동 귀족으로 일컬어지는 현실이 있는 것, 노동 쟁의가 유연성을 결여하고, 강렬한 행동을 취하는 등 쟁의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등을 지적, 노사관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도 이미 반복되어 논해 온 것이며 일본의 재한 경제인도 몇 번이나 한국측에 개선의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 아래 장기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관행이기 때문에 개혁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이 문제는 한국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되는 재계의 정치 헌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치 헌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사 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어떻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각 국·지역에서 자본의 유치 정책이 왕성한 시대이므로 한국이 노사 관계의 개혁을 추진시키지 않으면 자본 유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대구 지방은 일본에서도 알려진 섬유 산업이 활발한 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하여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탈리아에서의 기술 도입을 모색 중이었다.

부산에서는 한·일 투자협정도 현재 협의 중인 자유 무역 협정도 한국에는 거의 이익이 없다고 전해 들었다. 그 이유는 자유 무역 협정의 경우, 공업 제품에 관해서는 일본의 관세는 이미 제로에 가까운 상태이며, 협정을 맺을 때는 한국측만이 관세를 내려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도 다 한국측이 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일본에도 경쟁력이 강한 산물이 있어서, 이 분야에서도 한 마디로 한국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였다.

부산 지역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신발류의 대생산지이며, 수출지였다. 이 산업이 동남아시아 등의 추격을 받고 나서부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동남 아시아나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도 적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에서 실패한 기업도 많았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 이런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에 진출하여 투자하는 것은 대기업보다 리스크가 크고 곤란을 수반하다.

거기에서 부산 지역의 중소 기업의 사이에서는 현대 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북한의 개성공업단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현대 그룹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의 필요에서 사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이 사채를 구입해 두면 공업단지 분양시에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중소기업에 인기가 있다고 한다.

개성의 공업 단지가 부산의 중소기업에 인기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크다고 한다. 외국으로 진출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한국의 약 10분의 1의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현재 북한과의 철도의 연결도 진행 중이므로 이것이 실현하게 되면 한층 편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컨트리·리스크를 고려해도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3. 한·일 투자협정에 대한 반대

이번의 방한에서는 한·일 투자협정 등 경제의 자유화, 글로벌화에 반대하는 단체의 자료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단체는 노동조합, 참여 연대, 연구소, 변호사 단체, 장애인 연맹 등 30여의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2000년 3월에 결성되었다.

이 자료는 한·일 투자협정에 반대하는 주장 등 5개의 문서를 정리한 것이며, 각 문서의 타이틀은 다음과 같다.

- (1) 초국적 자본의 권리 선언 : 투자 협정
- (2) 장미 빛 환상, 암울한 미래 한·일 투자협정의 올바른 이해 :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3) 외자 유치는 만능 약이 아니다. : 물질적인 경제 성장이 아닌 금융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자본의 운동의 오늘과 내일
- (4) 정부의 주장대로 한·일 투자협정은 고용의 창출과 경제 성장, 세수 증대를 초래할 것인가? : 한·일 투자협정에 관한 정부의 주장에 대한 비판
- (5) 투자협정에 의한 외자 기업의 노동권 제한의 사례

이상의 문서의 타이틀로부터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1)의 문서는 투자 협정 일반에 대한 비판이며, (5)의 문서는 멕시코의 마키라도라 수출 자유 지역과 한국의 마산 수출 자유 지역에 있어서의 노동권 제한의 사례이다. 그 외 (2), (3), (4)의 문서는 모두 한·일 투자협정에 관한 비판문서이다. 여기에서는 다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2)의 문서 안의 한·일 투자협정의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만을 소개하기로 하면 이하와 같다.

「한·일 투자협정과 같은 양자간 투자 협정에 있어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는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간의 그리고 해외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간의 차별 금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차별 금지>가 의미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덜 나은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을 금지한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와 각 국의 구체적인 국내 상황에 의해 형성된 각종 정부 정책들을 폐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국적 조치와 같은 예외적 사항이나 중소기업 및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며 민중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예외적 혹은 국가 자율적인 정책과 사항들을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의 원칙인 것이다. 물론, 한·일 투자협정에는 방위 산업, 스크린·쿼터⁴⁾ 전기·가스과 같은 일부 공기업을 내국민 대우 적용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외 조항의 범위와 적용은 일본 자본의 이해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이다. 즉, 일본 자본의 경쟁력이 우세하고, 사유화 및 자유화를 원하고 있는 금융·통신·철도 등의 핵심 산업은 예외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국내에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스크린·쿼터는 예외 조항으로 두면서도 애니메이션, 음반, 출판업 등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시장 장악력을 확보하고 있고, 미래에도 시장 점유율의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들은 내국민 대우의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결국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원칙은 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 통신과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한 각종 제도들의 폐지와 같이 민중들의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자율적 주권 및 문화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 일본 자본의 국내 진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본 자료의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에 관한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살펴볼 때, 협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일 경제 관계도 함께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하나는 먼저 살펴본 한·일간의 직접투자의 액수와 1건당의 액수의 격차이며 또한 <표 2>에 제시한 무역 관계이다.

<표 3> 최근의 한국의 대일 수출입

(단위 : 억불)

연	수입액	수출액	수 지
2001	266	165	-101
2002	299	151	-148
2003	363	173	-190

자료 : 한국 관세청

4)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외국 영화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상영을 제한하는 것

한·일간의 무역 임밸런스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도 한국의 수입초과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폭 증가하고 있다. 투자 협정이나 자유 무역 협정의 문제는 이러한 양국의 경제 관계의 실태와의 관련으로 생각하고, 쌍방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의논해 갈 필요가 있다.

4. 일본의 대 일본 직접투자 도입 정책의 적극화와 한·일 해협권지역

일본은 오랫동안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주력하고, 외자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의 정체가 계속되면서 점차 외자 도입을 도모하게 되었다. 우선 1994년 정부는 『대 일본 투자 회의』를 설치했다. 이 회의는 내각 총리 대신을 의장, 경제 재정 정책 담당 대신을 부의장으로 하고 관계 각료에 의해 구성되는 회의로 대내 직접투자에 관한 각 방면의 의견 집약이나 대 일본 투자시책의 주지 등을 행해 왔다.⁵⁾

2000년경까지의 주요 정부 시책으로서는 기업의 흡수 합병·매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정비, 토지 이용 규제의 완화나 부담의 경감, 노동 이동의 원활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세제 개정 등이 있다. 또한 정부 관계 기관인 일본 무역 진흥회(JETRO)나 일본 개발 은행(현, 일본정책 투자 은행) 등은 대 일본 투자에 관한 정보 제공, 외자계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등을 행해 왔다. 그러나 20세기말경까지의 일본의 대 외국 기업 정책은 극히 소극적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9년경부터 드디어 적극적인 자세가 보여 '99년 4월 『대 일본 투자 회의』는 정부가 금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제반 항목을 들고 있다.⁶⁾

- (1) 지방 공공단체의 외자 기업 유치의 적극화
- (2) 외국인 거주 환경의 정비
- (3) 대 일본 투자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체제의 확립
- (4) 기업 경영에 관한 제반 제도 정비의 일층의 촉진
- (5) 규제 완화의 일층의 추진
- (6) 인터내셔널·스쿨의 설립·운영의 원활화
- (7) 의료에 관한 외국인용 정보 제공의 충실
- (8) 지역별 대 일본 투자 촉진 협의회에 의한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와의 연계의 촉진

5) 일본의 대내 직접투자는 구미 제국에 비교해서 극히 적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외국 자본에 관한 통계상의 문제로 직접투자의 액수가 실태보다 상당히 과소 평가되어 있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최근 공표되고 있다. 岩田一政 편 『일본의 통상 정책과 WTO』 일본 경제 신문사 2003년 4월 제6장 참조

6) 외무성 홈페이지 분야별 외교 정책 사이트에 의함.

(9) 불평·요망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들 항목을 살펴보면 일본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얼마나 과제가 많은가를 말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제트로(JETRO)가 대 일본 직접투자에 관해서 일본에 진출을 도모하는 외국의 제조업과 유통업이 조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투자 저해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행하여 2000년 6월에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일본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히어링(hearing)을 주로 하고, 해외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4개국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투자 저해 요인이 지적되었다.

(1) 공적 기관의 정보 제공 체제의 불비

일본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환경에 관한 정보를 1군데에서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저쪽 돌지 않으면 안되고, 시간과 코스트가 든다. 구미에서는 기본적으로 1군데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2) 토지제도의 문제

일본에서는 임대차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가 커지고, 리스크와 코스트가 높다. 또한, 토지제도가 아주 복잡해서 알기 어렵고 토지 이용이 불편하다.

(3) 법무·회계 서비스의 비용이 비싸다

일본에서 행정 서사, 사법 서사 등 구미 제국에 없는 전문 자격 제도가 있고, 또한, 변호사·공인 회계사 등의 사무소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외국 기업은 일의 의뢰에 불편함이나 곤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과잉 경비의 부담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4)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 대표자」나 「기술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하다.

(5) 인감 증명, 보증 제도

일본에는 구미 각 국에 없는 「인감증명」이나 주택·자금의 차입시에 「보증인」을 요구되는 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제도는 외국 기업에게 큰 곤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는 많은 초기 투자 저해요인이 있는 결과, 생산 거점 설립, 사무소 설립, 회사 설립 등기, 주재원 주택·교육 관련, 비자 취득 등의 필요 경비를 종합적으로 구미 각국과 비교하면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은 14, 영국 24, 독일 20, 프랑스 9로

완료되는 등, 큰 격차가 있다고 한다.⁷⁾

이상은 구미 각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경우이지만, 일본(요코하마)과 아시아 각 국(싱가포르, 홍콩, 타이베이, 서울, 칼라폼푸르, 방콕, 상하이, 마닐라, 세부)과 비교해도 일본의 투자 관련 코스트는 극히 높고, 1996년 기준으로 상하이의 18배, 서울·타이베이의 약 4배, 홍콩의 1.7배, 싱가포르의 1.4배 등으로 산출되어 있다.⁸⁾

이들 결과를 보면 일본은 세계에서 외국 기업에 있어서 가장 일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 같지만, 2003년 9월 방한시, 필자는 한국에서 본 투자처로서 일본에 대해서도 감히 질문해 보았다. 그것에 대한 회답은 다음과 같다.

한·일 투자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한국, 특히 중소기업과는 상관이 없다. 한국에 비교해서 일본은 땅값, 통신·유통 비용 등 모두가 높고, 고 코스트 국가이다. 한국보다 낮은 것은 금리 정도이지만, 이것은 일본에서는 자본이 남아 있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일본은 다액의 자본 수출국이다. 게다가 일본은 판매 시장으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에 투자할 이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이상의 회답은 거의 예상된 내용이었지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지적이 있었다. 그 지적은 일본에 대한 진출에는 감정적인 저항감이 있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저항감이란 일본에서는 한국을 일반적으로 낮게 보고 있어서 일본인은 한국의 경영자 아래에서 일하는 것을 안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이다. 그러한 현실이 대 일본 투자의 저해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며, 듣고 보니 필자는 현재의 일본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부정할 자신은 없었다.

귀국 후 부산발전연구원과 일본의 동 아시아 종합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시아 자유 무역권 형성과 물류 협력」이라는 심포지엄(2003. 8. 28)에서 같은 문제가 의논되었음을 알았다. 거기에서는 일본의 경제구조개혁의 필요를 논한 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일본을 아시아에 개방하는 것, 바꿔 말하면 일본인이 아시아와 아시아인에 대하여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예는 아시아에서의 직접투자의 흡수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여전히 외국 자본이라고 하면 즉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곤란에 빠진 일본 기업이 중국과 타이완 기업으로 매각되어, 개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적 우월감 콤플렉스를 가진 일본 직원은 회사인수로 중국, 타이완, 한국에서 온 회사 대표 아래에서 일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25년 전 도요타와

7) JETRO·홈페이지 「대일 액세스 실태조사에 대해서」에 의함.

8) 青木 健·馬田 敬一 편저 『WTO와 아시아의 경제 발전』 동양 경제 신보사 2002년 8월 p.199

혼다가 유럽과 북미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인과 미국인은 거의 같은 심리적 거부감을 경험했다. 그들은 경제와 일에 집중하는 것에 의해 이것을 극복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일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날 일본인은 그러한 심리적 적응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같은 아시아권에 살면서 일본인이 이러한 적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 일본은 일본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장한 아시아 기업의 경제적 지원과 에너지를 빌릴 때가 왔다.」⁹⁾

구미인이 일본 기업에 느낀 심리적 거부감과 일본인이 아시아 기업에 느끼는 거부감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되지만, 필자도 기본적으로 이 논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아직 나라의 정책 으로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최근, 외국 기업 유치 정책이 점차 지방 자치 단체 레벨 까지 침투하고 있다. 한·일 해협권의 현이나 정령 지정 도시에서는 외국 기업 유치 정책이 내세워져 있으며 담당 부서를 설치한 자치 단체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사례로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기타 큐슈 시의 3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경제 산업성이 2003년도에 모집한 『선진적 대내 직접투자 추진 사업』에 응모하여 전국에서 5개 중의 하나를 뽑힌 것이다.¹⁰⁾

이 사업은 지방 자치 단체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외국 기업 유치 계획을 작성·응모하고, 경제 산업성에 선정되면 연간 약 6천만엔 정도의 지원이 행해진다고 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방 레벨에서 외국 기업 유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본받는 것에 의해 유치사업을 확대시키면서, 대내 투자의 저해 요인을 제거해 가고자 하는 데에 있다.

후쿠오카현 등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아시아와의 지역간 분업을 목표로 하는 실리콘·시벨트 후쿠오카 프로젝트, 독일과의 환경교류, 국제물류 특구 등 타 지역에 없는 선진성과 이 지역 고유의 산업 집적, 연구 개발 기능 집적 및 우수한 비즈니스 인프라 등의 우위성을 널리 해외에 어필하고 타겟 기업의 선택이나 기업 간부의 초대 및 Top Sales 등을 행하고, 지역이 일체가 되어서 해외 기업의 진출 서포트를 원 스톱(one stop)으로 제공합니다.』¹¹⁾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외국 기업 유치에 대한 대응은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당혹감도 있고 더듬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감이 있다.

9) 부산발전연구원·동 아시아 종합 연구소 『동북 아시아 자유 무역권 형성과 물류 협력』(2003년 8월)의 津上 俊哉 『동북 아시아 경제 통합과 한·일 자유 무역 협정(FTA)참조. 그리고 이 자료는 한글과 영어로 만들어져 있다.

10) 후쿠오카 이외로 선정된 곳은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 효고현·고베시, 오사카부·오사카시 등 미야기현·센다이시의 4사업이다.

11) 경제 산업 홈페이지 『대일 직접투자 촉진』 사이트 및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기업 입지 사이트

맺음말

한·일의 사이에서 투자 협정이 맺어져 시행된 것을 계기로 한·일간의 직접투자에 대해서 예비적인 조사와 검토를 행해왔다. 투자 협정 자체는 높은 레벨의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국내 사정은 협정 이외의 곳에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직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높은 레벨의 투자 협정』과 국내 사정의 언밸런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서두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북동 아시아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제 협정의 제안이나 교섭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작년 봄 『동북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국이 담당한다고 하는 정책 구상을 공표하고 있다.¹²⁾ 특히 물류와 금융 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 해협권 지역의 각 자치 단체도 우선 외국 기업에 어떤 정책으로 임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어 있다. 현 단계에서는 일본측의 해협권의 각 자치단체는 대부분 겁내면서 한 걸음 내딛은 상황에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각 개인의 레벨에서도 일본의 다양한 전통적 제도가 관습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의식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끝으로 아마 긴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21세기에 들어 북동 아시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미 중·한·일의 3국 자유 무역 협정을 제기했다. 한국도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도 이 방향으로 경제권의 형성에 노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평화롭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21세기는 북동 아시아의 각 국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평화스러운 세기로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울산 발전 연구원, 부산 발전 연구원, 대구 발전 연구원 및 한국 무역 센터 후쿠오카의 여러분께 특히 협력을 받았다. 여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12) 邊衡尹『동북 亞細亞 경제권 형성과 규슈』(久留米 대학 경제학부 창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3. 10.11) 이 논문은 근일중에 久留米 대학의 출판물로서 출판될 예정이다.

참고문헌(순 부동)

- 경제 산업성 규슈 경제 산업국『규슈 아시아 국제화 리포트 2002』 2002년 9월
- 규슈 대학 한국 연구 센터『일한 산업 경제권과 규슈』 2001년 12월(국제 심포지엄 2001)
- 일한 해협권 연구 기관 협의회『해협권 연구』 제 1, 2, 3호
- 부산발전연구원·동 아시아 종합 연구소『동북아시아 자유 무역권 형성과 물류협력』(2003년 8월 제7회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 기록)
- 주일 한국 기업 연합회·한국 무역회 도쿄 지부『주일 한국 기업 명부 2002~2003』
- 青木健·馬田啓一 편저『WTO와 아시아의 경제 발전』 동양 경제 신보사 2002년
- 安部一知·浦田秀次郎 편저『일 중 한 직접투자의 진전』 일본 경제 평론사 2003년
- 今井宏·高安健一·坂東達郎·三島一夫『21세기 아시아 경제』勁草 서방 2003년
- 岩田一政 편『일본의 통상 정책과 WTO』일본 경제 신문사 2003년
- 平川均·石川幸一 편저『신 동아시아 경제론』미네루바 서방 2003년